

# 광역대도시의 마을만들기 방향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해서

한승욱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창조도시와 마을만들기의 전성시대

최근 창조도시가 학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적 용어로써 자주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수렴하는 21세기의 도시 모델 중 하나로 창조도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각 도시뿐만 아니라 그 총체인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창조도시·창조경제·창조산업·창조계층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도시재생과 결합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신흥도시를 포함한 100여 개 이상의 도시들이 창조도시 구현을 도시의 정책적 목표로 삼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와 대만에서는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도시 조성을 정책적 목표로 삼는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창조도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문화도시전략의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한국에서 창조산업의 범위를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창조도시 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창조도시와 문화도시에 관한 담론들이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문화정책 혹은 도시정책의 맥락에서 창조도시와 관련된 이론들이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요 지자체들이 새로운 도시정책으로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창조도시와 더불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가 공공사업으로써 마을만들기의 추진이다.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도시의 발전단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시민적·행정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전국이 ‘마을만들기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1995년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도시 간 또는 지역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이미지 제고나 정체성 강화를 통한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각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사업으로 마을만들기가 추진 중인 마을들은 초동기(初動期)에 해당한다. 이러한 마을의 대부분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의 이름만 빌린 공공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일본

본고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마을만들기가 시작된 일본의 사례에서 공익적 마을만들기와 활동을 주도한 주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례 중에서 전담조직을 만들어 공공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부산시의 사례를 통해 광역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이후 광역단위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할 때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공익적 마을만들기와 코디네이터의 역할

일본은 두 번의 걸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발생했다. 그리고 군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를 정비하고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제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생활환경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건조물의 파괴, 대규모 개발로 인한 공해문제 등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위협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공공개발에 의해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주민과 지역사회는 공공의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고 관제도시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항적 운동으로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저항적 운동

1970년대 들어서면서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행정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단어가 사전에 등재된 것은 2006년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마을만들기는 생활운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주민자치나 시민권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종래의 마을만들기는 마을회관이나 보육소와 같은 물리적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여가와 같은 비물리적 요소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만들기의 공간적 범위가 도시권의 거시적 공간에서 일상생활권의 미시적 공간까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생활운동적 개념

다양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성립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있다. 바로 공익성이다. 공익이라는 거창한 이름

공익성을 추구하는  
마을만들기

때문에 공익적 활동은 정치가·공무원·기업가·학자 등과 같은 특정계급이나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보통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공익적 활동들이 의외로 많다. 일례로 반사회나 최근에 많이 구성되고 있는 주민협회의회의 활동들이 공익적 활동에 속한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활동 중에서도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도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일정의 공익성을 가지게 된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마을만들기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산업혁명기의 영국에 도달한다. 방적공장의 경영자이자 사상가이면서 이상주의자였던 로버트 오웬(Robert Owen, 1771~1858)은 마을만들기 개념을 실천한 마을만들기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인격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장 노동자를 위해서 주택공급과 건강관리,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였다. 또한 최근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생활협동조합과 유치원의 원형을 만들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영국의 근대 도시계획이 확립되는 시기에 도시계획가인 에버니저 하워드(Ebenezer Howard, 1850~1928)는 전원도시론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제어하고 도시와 자연의 공생을 실현하고자 했다. 레치워스(Letchworth)는 세계 최초의 전원도시로, 건축가인 레이몬드 언윈(Raymond Unwin 1863~1940)이 하워드의 이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했으며, 전원도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리·경영하는 경영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러한 영국의 전원도시운동은 일본의 근대 도시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메이지(明治)시대의 건국에 큰 역할을 한 실업가 시부사와 에이치(澁澤榮一)는 영국의 전원도시의 이념을 받아들여 전원도시를 건설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주요한 요직을 두루 거친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는 관동대지진 이후 도쿄 복구를 지휘하였다. 한큐 그룹의 창설자이자 다카라즈카 극단 창설자인 고바야시 이치조(小林一三)는 교외주택지의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든 과정이 건축가나 기술자가 아닌 실업가·문화인·정치가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의 선구자들은 건축가나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높은 이념과 명확한 비전을 가진 프로듀서였다. 건축가나 기술자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마을만들기의 주체가 반드시 기술자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통용된다. 과거의 마을만들기 선구자들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고 특권계층이었으나 현재의 마을만들기 주체는 일반시민이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시민사회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졌고 마을만들기의 목표도 다양해졌다. 이제는 자신이 바라기만 하면 마을만들기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체는 일반시민

주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 자발적 참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비롯된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략적인 접근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관련 모임에서 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모두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열심히 참여하는데 때때로 논의가 쓸데없이 반복되거나 논점이 흐려져서 마을만들기가 수년 동안 전혀 진전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 활동 자체가 자연스레 소멸되어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마을만들기는 추상적인 논의만으로는 성과를 도출할 수 없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따라서 마을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때로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것이 마을 코디네이터(‘간사’, ‘활동가’ 등으로 불린다)의 역할이다. 코디네이터의 능력에 따라서 그 지역 마을만들기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는 아주 고도의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관여하는 마을만들기가 성공하고, 그것이 지역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일하고 있다.

#### 마을 코디네이터

####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코디네이터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가 있다. 2009년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1983년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을 때 목표로 삼은 것은 커뮤니티 오거나이저(Community Organizer)였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관여하는 지역 활동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치적 색깔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정치적인 부분만 제외한다면 앞서서 말한 마을 코디네이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커뮤니티 오거나이저가 되고자 했던 당시만해도 이를 직업으로 생각한 사람은 적었고,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금융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시카고 공영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활동했다. 그때 얻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서 내가 배운 것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문이 닫혀 있는 워싱턴의 의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마을의 한구석, 현관 앞, 거실이나 집회소다. 자신이 속한 지역을 바른 모습으로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보통의 사람들 손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마을만들기를 민주주의의 실천이라 믿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는 대도시에서 마을만들기가 가지는 의미와 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을 직접 입증했다 할 수 있다.



## 공공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의 전개

### 1. 부산광역시의 마을만들기사업 현황

부산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노동자들의 거주지, 광복 후 귀환동포의 정착지, 6·25전쟁 피난민의 대규모 정착지, 고도경제성장기에 부산으로 몰려든 서민층의 무허가 정착지 등이 도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낙후지역이 산재해 있는 부산에서 산복도로 일대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 복원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중구·서구·동구·부산진구·사하구·사상구 등 모두 6개 구의 54개 동이 대상지에 포함된다. 그 중에서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지형·생활공동체 등을 고려하고 녹지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3개 권역, 9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었다. 공간과 문화, 생활재생 등 자력수복형 복합재생이 사업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 2012년도 추진 사업 목표 및 내용

| <b>살기 좋고 활기찬 산복도로 만들기</b><br>(유형별 공간재생, 생활재생, 문화재생 - 자력수복형 종합재생) |                                                                                                  |                                                                                                |                                                                                                   |                                                                                   |                                                                                                      |
|------------------------------------------------------------------|--------------------------------------------------------------------------------------------------|------------------------------------------------------------------------------------------------|---------------------------------------------------------------------------------------------------|-----------------------------------------------------------------------------------|------------------------------------------------------------------------------------------------------|
| 추진유형                                                             | 기반시설                                                                                             | 공동이용 시설                                                                                        | 지역특화 상징                                                                                           | 마을만들기                                                                             | 주민역량강화 (공동사업) 등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환경 개선</li> <li>● 가로경관 개선</li> <li>● 골목길 정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작업장</li> <li>● 문화학습관</li> <li>● 쉼터, 우물복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방로 체험관</li> <li>● 작은 박물관</li> <li>● 홈마일 프로젝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li> <li>● 마을기업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복도로 축제</li> <li>● 원스톱 의료지원</li> <li>● 유네스코 워크캠프</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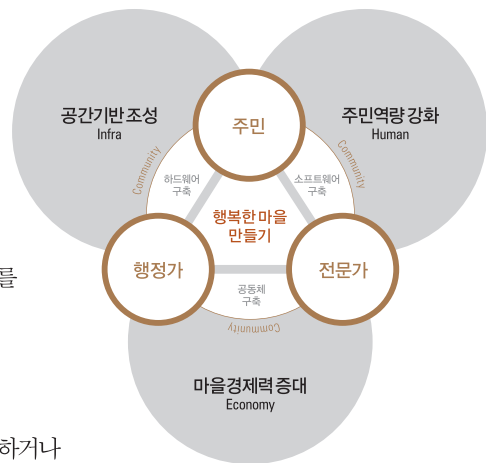
자료 : 부산시 행정자료 제공성, 2012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성과로는 먼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25개 마을에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마을아카데미를 통해 653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그리고 마을탐험대나 마을기자단과 같은 주민참여형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마을 경제자립기반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곳의 마을기업 창업을 지원했고, 현재 산리 공동체를 포함해 주민주도의 사단법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지대 도로개설이나 30곳의 노후불량계단 정비, 소공원 및 쉼터 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도 실시하였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낙후된 틈새주거지역에 종합적 재생사업을

실시해 주민의 삶 질 향상과 마을단위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문화의 통합적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3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 사업추진과 주민 역량강화 그리고 사업 후의 자립적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 유형으로는 지역의 공간 특성을 고려한 시설정비를 하고 지역정체성 확보와 노후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공간기반조성(Community Infra)형, 지역주민의 자발적 관심과 활동참여를 통한 주민역량강화(Community Human)형, 지역특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사업을 발굴하거나 마을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마을경제력증대(Community Economy)형이 있다.

###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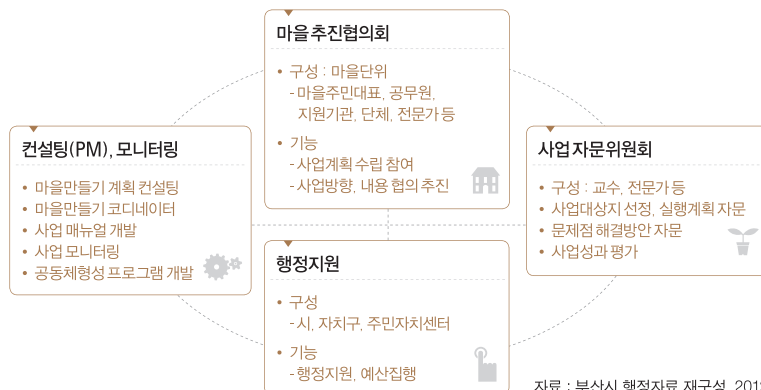


자료 : 부산시 행정자료 재구성, 2012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2010년에 4개 마을과 2011년에 11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해당 마을을 대상으로 33개의 생활환경개선 사업, 55개의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다. 5개의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그간의 사업성과로 상리마을의 알코올치유센터, 철쭉마을의 커뮤니티가든 등이 지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마을의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이 10개 마을에 만들어져서 다문화 공방과 천연염색 공방 등이 운영 중에 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011년부터 4,500여 개 통단위의 결핍지수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 공동체 복원형 재생사업

###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체계도



자료 : 부산시 행정자료 재구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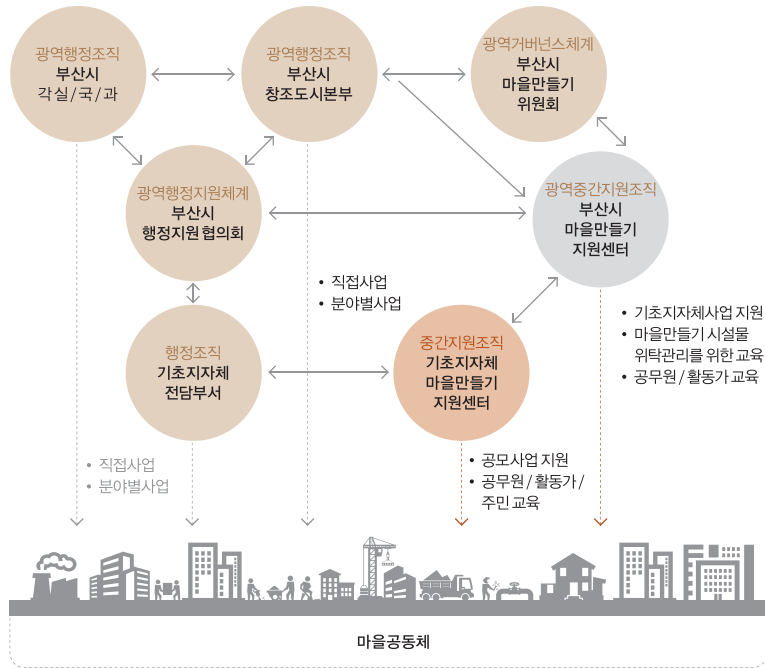
추진에 앞서 사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커뮤니티 뉴딜 시범지역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공동체 지원사업, 신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투입하기 위한 임팩트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과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이 세분화 되어있다. 2012년 5월에 사업대상지 7곳을 선정해 코디네이터 9명을 지정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2차 대상지 5곳과 활동가 6명을 선정하였다. 커뮤니티 뉴딜 시범사업을 이끄는 코디네이터들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마을활동가 아카데미교육 6개월 과정을 수료한 후 현장에 투입되어 활발한 활동 중에 있다.

## 2. 광역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체계 구축

현재 추진 중인 공공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역량과 추진력을 가진 지역주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역량을 가진 지역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초동기 마을만들기에서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고 지역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중간지원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지원조직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2003년에 제정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조례를 필두로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부산시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업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시 조례)를 2012년 7월 11일 제정하였다. 조례에 담겨있는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마을만들기 추진체계로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한 마을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다.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되는 행정부서 간의 의견조율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구성을 마을만들기와 업무상 관련이 많은 실·국의 책임자로 구성할 필요에 따라 해당 실국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보완적 조치로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 내의 사업 간 협조를 위한 행정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실무자, 그리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단체에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위원회의 활동에 보다 많은 사람이

###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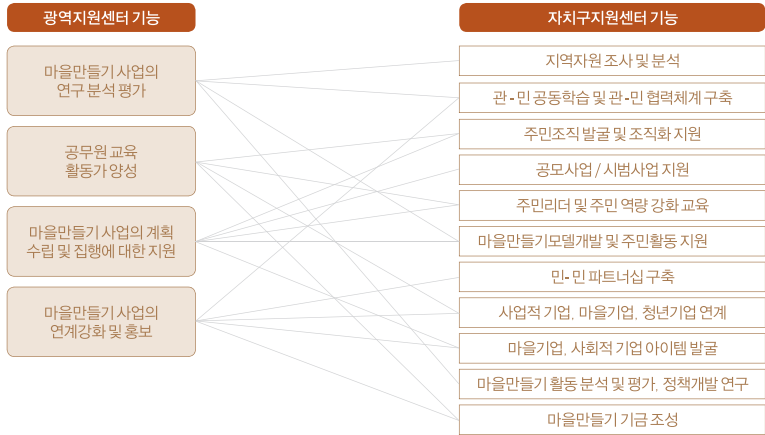
자료 : 한승욱, 2012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제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시 조례에는 지원사업, 프로그램, 조직구성, 운영방안 등에 대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설립하게 될 지원센터의 위계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면 부산광역시 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할 당시 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각종 공모사업을 직접 추진할 경우 조직의 비대화와 관련조직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그래서 지원센터의 업무를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홍보, 교육, 연구·분석과 마을만들기 컨설팅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지원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업무를 교육과 지원업무에 집중해 업무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 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례에도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 광역 및 기초단위의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자료 : 한승욱, 2012

광역과 기초단위  
지원센터간 역할분담

또 다른 고민은 부산시가 직할하는 광역단위의 지원센터와 각 자치구가 설립하게 될 기초단위 지원센터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단위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상정하고, 광역단위의 지원센터에서는 부산시 전체의 마을만들기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광역단위의 지원센터는 자치구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광역단위에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이미 추진 중인 광역단위 시범사업의 계속적 추진과 이와 관련된 기초단위의 사업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적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 기초단위의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기초단위의 지원센터 기능으로는, 마을중심의 마을만들기 지역자원 조사 및 분석, 주민조직 발굴 및 조직화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 교육,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활동의 직접지원 등처럼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광역단위의 지원센터가 총괄하는 역할을 하지만 추후 각 자치구에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점차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을 잡았다.

## 마무리 글

최근 지원조례 제정과 다양한 시범사업의 추진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마을만들기사업이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도시재생 특별법

2013년 12월 이후부터는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법을 계기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도가 높아지면 보다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시범사업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 제3섹터의 조직

앞으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체계의 정비와 지원조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원조직은 민관 협력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공공성 확보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행정조직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제3섹터의 조직’으로서 위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지자체인 부산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는 광역지자체의 지원센터가 지원조직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실행주체이자 지원자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시범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민참여형이라고는 하나 공공이 주도해 마을만들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많다보니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될 수 없었던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이후의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가 늘어나고 생활적 운동으로 확산된다면 기초단위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만들기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기초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운영과 탄력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포함한 광역단위 지원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기초단위의 지원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초단위에서도 광역단위에서 시행한 정책들과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모델로 삼아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면서 자치구 내 지역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면 가장 낮은 단위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마을만들기의 움직임이 보다 쉽게 보다 넓게 확산될 수 있으며 마을만들기가 법정 도시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한승욱 외, 『창조성과 도시』, 소명출판, 2013
- 2 한승욱 외,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부산발전연구원, 2012